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 협력

- 일시 | 2012년 11월 8일 (화) 오후 2:00 - 6:00
- 장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최병오 홀
- 주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14:00	(5)	개회사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
14:05	(5)	환영사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회의] 미국 차기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			
14:10	(5)	사회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14:15	(20)	발표1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관계 전망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4:35	(20)	발표2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우리의 선택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4:55	(30)	토론	마상윤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5:25	(25)	질의응답	
15:50	(10)	휴식	
[제2회의] 동북아 안보와 경제 협력 복합그물망의 현재와 미래는?			
16:00	(5)	사회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6:05	(60)	발제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상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17:05	(55)	전체토론	
18:00		폐회	

차례

[제1회의] 미국 차기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

- 발 표 1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관계 전망..... 4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발 표 2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우리의 선택..... 16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제2회의] 동북아 안보와 경제 협력 복합그물망의 현재와 미래는?

- 발 제 1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 23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발 제 2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 28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발 제 3 동북아 지역협력의 전망..... 34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4 동북아 지역협력: 러시아의 관점에서..... 38
고상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제1회의]

미국 차기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관계 전망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I. 서론

II. 미중 관계의 역사적 궤적

1. 죽의 장막에서 중국미국 카드로의 전환
2. 전략적 불신과 상호 헤징

III.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1. 현명한 축소와 선택적 관여
2. 선택적 관여와 '3+3' 체제 구축 강화

IV. 미중 지도부 교체와 미중 관계 전망

1.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2. 영유권 분쟁과 미중 관계

V. 결론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과 미중관계 전망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2012년 동북아 정치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사건은 아마도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도부 교체일 것이다. 2012년 동북아에서의 지도부 교체는 먼저 3월 러시아에서 제3기 푸틴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4월 들어와서는 3대 세습을 통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출범이 이어졌다. 러시아와 북한에서의 권력 변동이 2012년 동북아 지도부 교체의 서막이었다면, 11월에 들어와 연이어 전개된 미국과 중국에서의 오바마의 재선과 시진핑 체제의 등장은 2012년 동북아 정치에서 지도부 교체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은 동북아의 지도부 교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러한 동시적 지도부 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출범했거나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동북아의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남북한 및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양자적·다자적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의 외교안보정책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사하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이며, 이것이 미래 동북아 정치의 전반적인 윤곽과 성격을 결정지을 것이다. 특히, 지도부 교체에 따른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21세기 국제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바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향후 동북아 국제정치가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인가를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글의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의 제2절에서는 냉전기

미중 관계의 변화양상과 냉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중 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긴축 재정시기를 고려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으로 현명한 축소(graceful retrenchment) 전략과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을 고찰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소위 '3+3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3+3 체제' 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3은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를 의미한다. 후자의 3은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유지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한국일본', '미국일본호주', 그리고 '미국일본인도' 로 구성되는 협력안보체제를 의미한다. 제4절에서는 미중 지도부 교체에 따른 2013년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변화를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주요 변수가 동아시아에서 미중 관계의 변화 양상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권 확장에서 연유하는 역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미중 관계의 역사적 궤적

1. 죽의 장막에서 중국미국 카드로의 전환

지난 냉전기 미중 관계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데탕트(De'tente)를 전후로 죽의 장막(Bamboo Curtain)과 중국 카드(China Card)로 압축된다. 먼저, 죽의 장막은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 이후 1969년 닉슨(Nixon)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즉, 냉전의 진원지이자 핵심 지역이었던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철의 장막(iron Curtain)으로 표현했듯이, 죽의 장막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상이함으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주된 위협세력이라는 미국의 중국 인식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미중 관계는 사실상 단절의 관계이자 대만 문제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Mekong Valley)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국 주변의 지역 정세를 둘러싸고 미중 간 주기적인 갈등과 마찰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의 출범과 국제정세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미중 양국의 근본적 관계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닉슨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자신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¹⁾ 현실주의 사고에 입각한 닉슨 행정부의 출범으로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미중 양국의 지도자는 소련의 지속적 군사력 증강과 극동 및 세계의 주변 지역에 걸친 소련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우려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양국 관계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식별

1) Leonard A. Kusnitz,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America's China Policy, 1949-1979*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4), p. 114.

가능한 공동이익을 위한 화해를 모색하기를 원했던 것이다.²⁾

특히, 세력균형논리에 입각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에 내재되어 있는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균형(balancing)전략에 있어서 중국은 최적의 전략적 카드(중국 카드)로 인식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소련과의 이념논쟁 및 60년대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소련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중국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최적의 전략적 카드(미국 카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는 1972년 2월 닉슨의 북경 방문으로 미중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³⁾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미국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중국은 경제 근대화를 위한 미국을 통한 서방 선진기술의 획득 필요성)가 첨부되면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고, 1978년 10월 중일 평화화해우호조약의 서명과 더불어 미중 국교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⁴⁾ 1978년 12월 15일과 16일 미중 양국에서 공표된 국교정상화에 관한 최종 협정 이후 1979년 1월 1일 미중 관계는 공식적인 국교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는 양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기적인 갈등과 협력의 순환관계를 보이면서 맨 처음에 중시되었던 전략적 관계와 대문 문제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⁵⁾

2. 전략적 불신과 상호 헤징

1989년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미중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근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을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시켰다. 특히, 1989년 6월 중국 심장부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면서 미중 전략적 불신의 서막이 되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냉전기 미중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던 전략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왔던 미중 관계는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부상이 보다 확연해짐에 따라 양국의 관계 역시 보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양상을 주기적으로 표출해 왔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일단을 보여 주었다. 부시 행정부 초반 전략적 경쟁지관계로 출발했던 미중 관계는 9·11 테러를 계기로 협력적 측면이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제2기에 들어와 미중 관계는 2006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협력적 성격이 공식화 되었고⁶⁾, 제1기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

2)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 4.

3) 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p. 684-787.

4) 미중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중국 카드의 전략적 실효성에 대한 카터 행정부 내에서 번스와 국무부, 브레진스키와 브라운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mes E. Dougherty, Robert L. Pfaltzgraff, Jr., *American Foreign Policy: FDR To Reagan* (New York: Harper & Low Publishers, 1986), 이수형 역, 『미국외교정책사: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pp. 436-42.

5) Harry Harding(1992), pp. 5-20.

6) Zoellick, Robert B., "U.S.-China Rel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서는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가 타국의 안보와 행복을 희생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⁷⁾

21세기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를 수식하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상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시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난 냉전기 미중 관계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가운데 경제적 관계가 점차적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냉전기 미중 관계에서는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선후의 문제이자 순차적 관계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와 유로존(Euro Zone)의 재정위기가 맞물린 세계적 긴축 재정시기의 도래와 세계경제의 No. 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있어서 양국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는 더 이상 선후의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 중요성을 갖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오늘날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해 상호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2006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대중 헤징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후⁸⁾ 미국의 대중 헤징전략은 균형과 관여에 의한 통합이라는 이중적 구성요소의 동시적 교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헤징전략은 칼리자드(Z. Khalilzad)를 비롯한 미국의 일단의 학자들이 미국의 대중전략으로 제시한 봉쇄와 관여를 결합시킨 컨게이지먼트(congagement)⁹⁾의 변형 형태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이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관점과는 달리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요소를 결합한 헤징전략을 안보전략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구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관여와 통합의 요소를 중시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이라는 힘의 전환에 대한 현실주의의 균형 요소를 중시할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¹⁰⁾

이에 따라 미국은 균형과 관여의 요소를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대중 헤징전략을 통해 현존 국제체제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지속심화시켜 나가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역할을 고무시키며, 중국의 인권법치 및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의 자유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헤징의 목적은 중국의 부정적 선택의 위험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긍정적 선택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¹¹⁾ 이와 마찬가지로 부상하는 중국 역시 지구적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대미 헤징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 투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건

Representatives, May 10, 2006

7) Steinberg, James B., "Administration's Vision of the U.S.-China Relationship," *Deputy Secretary of State Keynote Address at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September 24, 2009

8)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0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6)

9) Zalmay M.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 Rising China: Strategic and Military Implications* (Santa Monica: RAND's Project Air Force, 1999)

10) 이수형,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3호, 2012년, p. 10.

11) Abraham M. Denmark, "China's Arrival: A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in Abraham M. Denmark and Nirav Patel(eds.), *China Arrival: A Strategic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9), pp. 159-80.

과 지역적 열망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최대의 위협은 미국이라는 이중적 인식에 따른 결과이다.¹²⁾

이처럼, 동아시아 안보상황에서 미중 강대국이 상호 헤징행태를 보이는 것은 상호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 조건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상호 헤징행태는 임시방편의 안보전략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보여주는 상호 헤징행태는 생존과 지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도 변화를 유인하여 지역·지구적 차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¹³⁾

III.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1. 현명한 축소와 선택적 관여

지난 제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전략은 다자주의적 축소(multilateral retrenchment) 전략과 반격(counterpunching) 전략으로 요약된다. 다자주의적 축소전략은 미국의 해외공약을 최소화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안보 공약에 따른 비용분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반격전략은 미국의 위상을 재천명하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재보증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⁴⁾ 전자가 긴축 재정시기를 맞이하여 미국의 유럽정책 및 NATO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후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긴축 재정시기의 도래, 세력배분 구조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예산 축소, 테러전에 대한 평가 및 조정, 미국 내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부상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향후 10~20년 동안 미국은 군사경제 영역에서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¹⁵⁾ 대전략의 조정을 추구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현명한 축소전략과 선택적 관여전략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전략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명한 축소전략이다. 축소는 상대적 패권 쇠퇴에 대한 대응으로 대전략의 공약을 철회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주변적 공약에 할당된 자원을 핵심 공약으로 재분배하는 외교정책의 전반적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 옵션 목록을 선정하여 이를 비용 절감, 위험 완화, 그리고 부담 전환으로 범주화시켜 국방비 삭감 및 불필요한 외교정책의 의무를 털

12) 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2005-2006, pp. 145-67.; Rosemary, Foot, "Chinese Strategies in a US-hegemonic Global Order: Accommodating and Hedging," *International Affairs*, 82-1, 2006, pp. 77-94.

13) 이수형(2012), p. 11.

14) Daniel W. Drezner, "Does Obama Have a Grand Strategy? Why We Need Doctrines in Uncertain Times," *Foreign Affairs*, 90-4, 2011, p. 58.

15) Robert Art, "Selective Engagement in the Era of Austerity," in Richard Fontaine and Kristin M. Lord, *America's Path: Grand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2), p. 15.

어내고 일부 지리적 영역에서 외교정책의 목표를 완화하고 특별한 쟁점을 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위협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해외 공약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동맹을 형성보강하는 외적 수단을 통해 축소를 단행하는 것이다.¹⁶⁾ 요컨대, 축소전략은 이전까지 과대 확장되고 과도하게 공약된 미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긴축 재정시기에 맞게 조정하여 국력 하락을 막고 경제력 재건을 통해 내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⁷⁾

축소전략과 유사한 또 다른 대전략으로 선택적 관여전략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전략으로 선택적 관여전략을 제시한 아트(Art)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지구적 힘의 분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가이익(첫째, 본토 공격에 대한 예방과 억지, 둘째, 유라시아 강대국 간의 심대한 평화 유지, 셋째, 안정적 석유 공급에 대한 보장된 접근 수호, 국제경제질서의 개방성 보호, 다섯째, 민주주의와 법 지배 확산 및 인권 보호와 내전에서 대량살상 방지, 여섯째, 심각한 기후변화 방지)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적 관여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⁸⁾

일반적으로 관여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또한 그 개념정의의 폭도 협의적 관여부터 광의적 관여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지만, 여기에서는 레스닉(E. Resnick)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관여란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층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접촉을 증진시킴으로써 목표 국가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¹⁹⁾ 따라서 선택적 관여란 변화된 국제정세 및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의 지구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역할 조정을 통해 6가지에 해당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트는 선택적 관여전략에 있어서 동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진방위 입장을 강조하고 지역적 실패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강제적 국가건설정책을 회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선택적 관여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선택적 관여전략의 핵심 임무들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방위 예산 삭감을 어떻게 추진하고,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걸프 지역은 별도로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 축소와 미국의 해외 기지 축소가 가능한가의 여부,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적 관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²⁰⁾

2. 아시아로의 복귀와 '3+3' 체제 구축 강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제1기 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현명한 축소전략과 선택적 개입전략 사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그 핵심은 대중 전략이 될 것이다.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전략은 군

16) Paul K. MacDonald and Joseph M. Parne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4(Spring 2011), pp. 7-44.

17) Christopher Layne, "Graceful Decline: The end of Pax Americana," *The American Conservative*, 9-5(May 2010), pp. 30-33.; Joseph M. Parnet and Paul K. MacDonald, "The Wisdom of Retrenchment," *Foreign Affairs*, 90-6(2011), pp. 32-47.

18) Robert Art(2012), pp. 15-17.

19) Evan Resnick,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2(2001), pp. 551-66.

20) Robert Art(2012), p. 24.

형과 관여에 의한 통합을 강조하는 헤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집권 초기와 후반부에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집권 초기에는 대중 헤징전략 차원에서 균형보다는 관여에 의한 통합이라는 전략적 보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1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헤징전략은 그 무게중심이 관여보다는 균형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2011년 가을 오바마 행정부가 공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중추(pivot) 혹은 재균형(rebalancing)과 2012년 1월 신 국방전략지침²¹⁾ 발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대중 헤징전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균형 요소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 재정시기를 맞이하여 미국은 현명한 축소와 선택적 관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대중 견제와 동맹국 안전을 재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영역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안보전략은 구체적으로 소위 '3+3체제' 구축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은 대중 균형과 동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① 미국-일본-한국, ② 미국-일본-호주, ③ 미국-일본-인도로 이어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차 아미티지(Armitage)-나이(Nye)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²²⁾, 이러한 3각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은 다름 아닌 일본이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동북아에서의 미-일-한 안보체제, 아태지역에서의 미-일-호주 안보체제, 그리고 동남아 해양과 남아시아에서의 미-일-인도 안보체제이다. 이중에서도 향후 미중 전략적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일-인도 안보체제이다. 이들 3국은 세계 선두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첨단무기 면에서 어느 잠재 경쟁국에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백악관이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²³⁾에서 강조하고 있는 해양의 지구적 공유지(global commons)의 안보 확보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IV. 미중 지도부 교체와 미중 관계 전망

1.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

2012년 11월에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동반 지도부 교체는 아시아 차원을 넘어 21세기 국제정치에 새로운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정책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에서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구적 차원에 걸친 경제·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가 향후 미중관계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양대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과 중국은 정치전통, 가치체계, 그리고 정치

21)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7, 2012

22)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2), pp. 11-12.

23)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January 25, 2012

문화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구조적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정책결정자들도 미국이 중국을 돕기 위해 아니면 해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²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양국 간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의 불균등한 변화로 인해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미-중 상호 불신의 원천과 영역별 오인

영역 혹은 쟁점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인식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패권 및 지배력 유지 ○ 중국의 부상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대체 ○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
정치·가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에 대한 평화진화전략 ○ 서구화, 국가분열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체제의 불안정성 ○ 국내 안정을 위한 국제적 위기 조성(민족주의 조장)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의와 협소한 국익중심 ○ 북한과 이란의 체제변화 기도 ○ 대테러전은 지역적·국제적으로 미국의 이익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규범과 레짐 강화에 책임있는 역할 미비 ○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과 이익을 희생으로 지역적 지배 도모
경제와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제적 실패 희생양으로 미-중 경제 마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주의적 입장 강화 ○ 희소자원의 전략적 접근
에너지와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중동정책은 지구적 오일공급 통제욕망 ○ 기후변화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위한 서구의 음모 	
국가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안보위협국 ○ 중국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대중 포위 전략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불신은 미국 체제(군부, 정보기관, 의회)에서 일정 정도 제도화 되어 있음 ○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계획의 불투명성 ○ 사이버안보영역과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
불신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전통, 가치체계, 정치문화의 상이성(구조적 불신원천)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와 평가의 부족 ○ 미비한 힘의 격차에 따른 의도의 불확실성 	

출처: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pp. 7-38 참조 작성.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전략적 대결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24) Andrew J. Nathan and Andrew Scobell, "How China Sees America: The Sum of Beijing's Fears," *Foreign Affairs*, 91-5, 2012, p. 33.

없으나 여타의 많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그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미중 관계는 구조적 협력과 경쟁의 구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 역시 스펙트럼이 넓어 어떠한 전략적 비전이 실현될지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미중 양국의 지도부 간에 갈등의 파열음이 생긴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 비롯될 것이다. 먼저, 전략적 영역에서 미중 간의 공동이익과 협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 또는 제한될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을 21세기 지구적 정치경제의 핵심적 축매체로 인식하여 이미 아시아로의 중심축을 이동하였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국제정치이론인 공격적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미국은 결코 강력한 중국의 존재에 만족할 수 없고, 중국의 지배 정권을 더 약화시키고 보다 친미적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⁶⁾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깨지기 쉬운 불안한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²⁷⁾ 이와 더불어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인식과 정책 처방 등도 미중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협력의 확대와 심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1979년 이후 근 30여 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국제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매년 평균 10%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 및 세계경제와의 상호의존관계를 확대시켜 왔으며, 오늘날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제2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금지, 자동차 등 주요 부품의 보조금 지급 논란, 그리고 지적 소유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기 등으로 양국 간에는 주기적·지속적으로 경제적 무역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고도성장에 따른 부정적 요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성장의 속도 조절, 소득구조와 분배문제, 관료부패, 그리고 내수 시장 위주로의 전환 등의 문제는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고, 내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 국제적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미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 새로 출범하는 미중 양국의 지도부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공동 분모를 만들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단기적으로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양자적,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 대

25) 전제성,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 2012년, pp. 123-53.

26) Andrew J. Nathan and Andrew Scobell(2012), p. 36.

27) Aaron L. Friedberg, "Bucking Beijing: An Alternative U.S. China Policy," *Foreign Affairs*, 91-5, 2012, pp. 48-58.

립과 경쟁보다는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해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부상과 쇠퇴/축소라는 양국의 권력 변화에 따라 미중관계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수렴보다는 상충되는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2. 영유권 분쟁과 미중 관계

새로운 미중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일 것이고, 이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의 사활적 안보이익과 관련하여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안보위협은 크게 4개의 동심원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영토적 통합이다. 둘째는 14개 근접국가와의 관계이며 이중 5개국(인도, 일본, 러시아, 한국, 베트남)과는 전쟁을 겪었다. 셋째는 중국 주변의 6개의 특징적인 지정학적 지역(동북아, 오세아니아, 동남아 대륙, 동남아 해양,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관계이다. 넷째는 중국의 주변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이다.²⁸⁾

이러한 4가지 동심원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했을 경우,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주변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영토 및 영유권이라는 지역적 휴화산을 활화산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가 가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비록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토 및 영유권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에서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영토 및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우방국 혹은 동맹국이거나 이 지역의 상대적 약소국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될 경우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일-인도의 3각 안보체제가 가시화 될 경우에는 영유권 문제와 결부되면서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호 수렴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은 세력균형이나 세력전이와는 별도로 위협균형이나 이익균형의 논리에서 영토 및 영유권 쟁점을 놓고 관련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가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는 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아니라 이 지역의 강대국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정책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의 아시아 전략과 대미대중 정책의 성격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은 이들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은 미중 전략적 관계에 일정정도 협력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자신의 입장을 고려, 특정 쟁점에 대해 독자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경우,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야망으로 미중 양국의 경쟁이 촉진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²⁹⁾

28) Andrew J. Nathan and Andrew Scobell(2012), pp. 33-34.

29) Khanna, Parag,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New York: Random

V. 결론

21세기 지구촌 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본격적인 긴축재정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당면 과제도 당분간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체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중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단순히 양국의 국가이익 도모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 걸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와 다양한 행위자로의 권력 분산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세계 지도자급 국가들 간의 협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정치전통, 가치체계, 그리고 정치문화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구조적 불신을 갖고 있고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양국 간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의 불균등한 변화로 인해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더불어 2013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중 간의 전략적 관계양상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전략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기존 안보전략의 검토와 새로운 대안적 안보전략의 모색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는 미중의 전략적 관계변화로부터 구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적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서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접근방법에서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선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 I. 2012 미국 대선과 한반도
- II. 차기 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 III. 한미대선과 대북정책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우리의 선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I. 2012 미국 대선과 한반도

1. 한반도에 대한 무관심

-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번 미국 대선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임.
- 미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 이슈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일면 당연하며, 이는 이번 미국 대선의 구조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외교안보 이슈 중에서도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반도 이슈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속성 때문이기도 함.
- 오바마와 롬니의 3차례 TV 토론에서 롬니만이 북한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했음. 이는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 자동차, 북핵문제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임.
- 더구나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선언하며(pivot to Asia or rebalancing)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하여 미국 국내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특이한 사항임.
- 하지만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 변화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임을 감안하면 이해할만한 것임. 3차례의 TV 토론에서 중국은 53회 언급되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함.
-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실종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 1) 이명박 정부이후 한미관계의 강화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선거용 어젠다가 없음.
- 2) 미국 정계 및 관계에서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감 및 좌절감이 존재하여 선거에서 부각시킬 유인이 없음.

2.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피로감

- 이전에 미국 정부내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비확산파와 지역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음. 비확산파는 북핵문제에 대한 핵비확산의 관점에서 강경대응을 선호하지만, 지역전문가들은 동북아 국제정지구도의 맥락에서 협상을 포함한 맞춤형 전략을 선호함.
-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감과 좌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즉,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도 제재도 모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상황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소위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로 언급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도 집권초기 북한에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 를 공언했지만, 2009년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제재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의 한미동맹 강화를 의식하여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미국 대선이후에도 한동안 정책 재검토 등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II. 차기 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1.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 기조

-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내년에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기존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음.
-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자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강경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임.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최근 “미 국무장관 후보들의 대북정책” 이라는 칼럼에서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예상되는 6명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거론하면서, 차기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 존 케리 상원의원,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이상 오바마)과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해글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키밋 전 재무부차관(이상

롭니)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인식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대체로 네오콘이나 협상론자들처럼 북한 체제 전복이나 대화만을 강조하는 극단적 입장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한반도 문제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인식됨.

2. 민주당 및 공화당의 전당대회 정강 정책 비교

- 이번 대선의 전당대회 정강(Platform)에서 나타난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음.
- 공화당 정강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재위주였음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a) 민주당 정강

-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외교정책을 재균형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서술함.
-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지속시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핵문제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자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혹은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그룹에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b) 공화당 정강

-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CVID 명시하면서 상당히 길게 북한문제를 언급함.
- 젊은 독재자 김정은의 위협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무기와 핵장치의 불법 이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PSI를 강화할 것이라고 함.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함. 2.29 합의에서 식량지원에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끝이 났으므로 북한에게 세 번째 속은 것으로 비판함.
- 따라서 식량지원은 핵무기 이슈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제재, 무역제재 등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이 상당한 대북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북한정권 붕괴시 중국과 협의할 수 있음을 언급함.

3.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

- 하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데, 전술한 미국정부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좌절감 및 피로감과 관련된 것임. 특히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

-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부시행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달성한 것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이 실현 가능하지 않으니 이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물론 리처드 솔로몬 전 차관보(조지 H.W.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부시행정부)처럼 6자회담의 중요성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음.
- 대체로 미국 국내에서는 북핵 협상의 장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비핵화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이러한 관점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대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임.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나 북한의 새로운 우리춤 프로그램, 북한이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부담됨. 또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달리 한국 및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

III. 한미대선과 대북정책

1. 대선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 결론적으로 대선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 미국은 11월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임. 한미관계는 분명 기존의 동맹관계 강화로 정리될 것이지만, 대북정책은 상당한 기간 특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임.
- 북핵위기 20년 동안 미국은 대북포용정책과 대북압박정책을 모두 시험했지만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강력한 한미공조에 바탕을 두고 대북제재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2011년 이후 시도된 미북접촉을 통해 2.29 합의를 이끌어내었지만 그마저도 좌절되었음.
- 따라서 현재 미국내에서는 어떠한 대북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대선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느라 한동안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음.
-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도된 2.29 합의의 실패는 차기 행정부에게 주는 의미가 크데, 미국이 더 이상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것임.

2. 한국대선 이후 대북정책 방향

- 따라서 최근 한미관계의 속성상 내년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원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12월의 한국 대선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데, 현재 한국의 대선 구도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모든 주요 후보가 집권시 대북정책의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박근혜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음.
-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정서상 이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 이 경우 대선이후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북핵문제에서도 새로운 협상국면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고민하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새로운 대북정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 마련을 협의할 수 있음.

[제2회의]

동북아 안보와 경제 협력 복합그물망의 현재와 미래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2010년 후반부터 *return to Asia*, *pivot to Asia*, *rebalancing* 등의 용어로 정식화되기 시작.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전략 파악과 관련, 다음의 질문 제기 필요:
 - 레토릭에 불과한가 아니면 근본적 전략적 내용의 변화인가.
 - 과거 미국 정부의 아시아전략과 어떠한 연속성 차별성을 가지는가.
 - 아시아 전략 중 대중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세계전략 속에서 아시아 전략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미 대선 이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전략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통 동맹 중시, 중국과의 발전적 파트너십 설정, 소/대다자주의의 적극활용, 시장/민주주의/항행자유/인권 등 규범에 기반한 아시아 질서 수립 및 강화.
 - 군사적 차원: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 강조, 해군력 강화, 아태지역의 남부지역에 대한 군사적 배치 강화(호주, 싱가포르 등), counter-A2AD 전략의 전개(Air Sea Battle, Joint Access Operational Concept 등),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강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새로운 전략적 차원 강화(말라카 해협 등)
 - 경제적 차원: 중국과의 경제력 협력 관계 강화 및 중국 시장 공략 전략(환율, 지재권 등), 아시아 시장을 이용 패권부흥 기반 마련, 한미 FTA에 이어 TPP 성공 지향, 이후 APT 등 새로운 발판 마련.
 - 외교적 차원: 보다 적극적인 아시아 다자협력기구에 참여, 미국의 규범제정자 역할 강조 및 신공공외교 강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배려 강화,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설정 지속.

Table I. Regional Shares of U.S. Merchandise Trade

	Exports		Imports	
	2000	2010	2000	2010
Africa	1.1%	1.8%	1.8%	3.7%
Asia including China	22.0%	23.5%	28.9%	32.2%
Asia minus China	20.3%	17.6%	22.6%	16.2%
Central & South America	6.0%	8.9%	4.7%	5.7%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0.3%	0.6%	0.6%	1.4%
Europe	18.8%	17.9%	15.8%	15.4%
Middle East	1.9%	3.1%	2.5%	3.3%
North America	29.5%	26.6%	23.2%	22.2%

Sourc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able A-I. Regional Shares of Global Merchandise Trade

	Exports		Imports	
	1980	2010	1980	2010
Africa	6.0%	3.3%	4.7%	3.0%
Asia including China	15.9%	33.3%	16.9%	31.4%
Asia minus China	15.0%	22.9%	16.0%	22.3%
Central & South America	4.5%	3.8%	4.9%	3.7%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8%	3.9%	3.3%	2.7%
Europe	44.1%	37.0%	48.8%	37.4%
Middle East	10.4%	5.9%	4.9%	3.6%
North America	15.3%	12.9%	16.5%	17.4%

Source: World Trade Organization.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얼마나 새로운가, 레토릭에 기반한 명칭은 적당한가에 대한 재고 필요.
 - 부시 전 정부의 아시아 정책 중 대테러전쟁 수행에 필요한 서아시아에 대한 관계 강화 노력, 기존 동맹과의 관계 강화 노력, 중국과의 관계 설정 노력, 한미 FTA 협상, TPP 참가 선언 등 기존 정책의 유지 부분 존재.
 - 오바마 정부 등장 직후 동남아 국가들의 소외감 배려, 남중국해 항행자유 강조, 한미 FTA 비준, TPP 협상 본격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 노력 등 레토릭 등장 이전 이미 아시아 전략의 재정비 시작.
 -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고 해도 중동의 지속적 중요성 고려 필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 주시 필요성, 민주화 이후 중동 상황이 미국의 이익에 역풍이 되는 상황 방지 필요성 (대선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오바마 정부의 중동 정책 실패 여부, 리비아 미대사 피살 문제).
 -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의 지속성과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를 감안해서 봐야할 필요.

○ 미국의 아시아 정책 중 대중 정책의 비중과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

- 대선 3차 TV 논쟁 중 오바마는 중국을 “adversary and potential partner” 라고 명명. 여전히 구조적 협력의 필요성과 군사, 외교적 견제의 이중 필요성을 강조.
- 미국 패권이 경제적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중국의 군사적 미국 밀어내기를 막아야 하는 이중적 입장.
- 올해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협력의 영역 모색 약속; 중국의 "consistent stake holder"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
-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논쟁도 지속. 특히 대중 전략을 둘러싼 미국 내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므로 향후 아시아 정책과 대중 정책의 방향 주시 필요.

○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개 방향 논의

- 대선 기간 중 미국의 아시아 정책 논쟁은 롬니 후보의 중국 환율조작국 설정 이외에는 의미있는 논쟁 부재. 중동 지역이 외교분야 논쟁의 초점이며 대부분 국내문제에 집중.
- 향후 미국 재정적자, 특히 군사비 지출에 대한 양당 간 대립 지속 예측, 전반적 군사비 감축 지속, 경제회복에 대한 관심 집중 필요성 때문에 군사 분야의 혁신적 변화가 당분간 일어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중국과의 구조적 협력 필요성 때문에 미중 관계의 급속한 악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충돌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위해 기존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강화 강조 및 부담 분담에 대한 압박 가중 예측 가능.
-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보다 활발한 참여, 아시아 순방 등 아시아 중시 외교의 강화 가능성.

○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문제점

- 미중관계;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중국 봉쇄전략으로 인식.
- 중국의 군사력 강화 지속, 이에 따른 대미 강경 군부의 세력 강화, 경제문제에서 미중 간 협상 가능성 축소,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문제에서 미중 간 협력 가능성 감소 등의 문제가 존재.
- 중국 주변국: 미국의 대중 군사견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 등 주변국의 대미동맹이 대중 전략과 충돌 가능성. 대미안보의존과 대중경제의존 간의 구조적 충돌로 인한 외교전략의 어려움 가중.
- 미국 중심 안보, 경제 아키텍처와 중국의 대응적 안보, 경제 아키텍처 간의 충돌 속에서 중견국 및 약소국의 외교적 비중 감소 및 미중 간 양자택일적 외교 강요 가능성.
- 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이해 정도;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아시아 질서 재편, 중국에 우월한 소프트 파워 강조, 보편적 지구질서의 기준 강조 등에 중점.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충질서를 가진 아시아의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전망. 북핵합조직원리에 기반한 이슈들의 해결은 각각의 고유한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해결 가능.

- 향후 미국이 영토분쟁, 역사해석 문제 등에서 역외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아시아 회귀전략과 충돌할 가능성. 특히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동맹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의 좌초 가능성. 또한 북핵 문제의 정치적 본질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새로워지지 않을 경우 주요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 하락.

○ 향후 한국의 대응 방향

- 새롭게 설정되는 미중 관계 속 한국의 전략 설정이 중요; 미중 충돌 불가피론에 기반한 미국 내 아시아 정책 수립가들을 경계할 필요성. 과대이론화와 자기실현적 예측, 공격적 현실주의 등의 위험성. 주변국의 미중 간 선택불가피론에 대한 담론 경계 필요성.
- 미중 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단계적 정책 수립의 전략이 중요; 미중 간 전략적 불신 완화 외교, 개별 이슈들이 전략적 대결 이슈로 상승되는 것을 막고 이슈별 갈등해결 메카니즘 마련 외교, 미중의 아키텍처를 대신할 대안적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지식외교, 중견국 협력에 기반한 미중 예인외교
-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외교와의 양립 가능성 추구. 특히 대북 전략의 변화에서 예상되는 대미외교의 어려움을 중장기 대북전략 마련으로 극복할 필요.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 I. 문제제기
- II. 중국 경제 · 정치 · 사회의 동향과 제약요인
- III.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 전망
- IV. 한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I. 문제제기

1. 시진핑 시대(향후 10년 동안)의 중국은 (1) 신흥 강대국으로서 국가정체성 및 비전의 정립, (2) 정치·사회 안정 및 지속적 경제성장 보장, (3) 미국과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한 국익 확보(미국의 전략적 견제 극복), (4) 세계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투사 기제의 구축이라는 전략 목표를 추진할 것임.

2. 핵심 고려사항은 중국의 경제적 보호주의, 국가주의, 수직적 역내질서 구축 전략, hard power + strategic soft power를 내세운 영향력 확산, China risk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거나 파급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새로운 발전모델로 승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임.

3. 한국의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주요 이슈:

(1)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재확인, (2) 한국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한·중 경제 관계 모색, (3)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성격 및 상호관계 규명, (4) 안정적 한·북·중 관계의 모색, (5) 대만해협 양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 (6) MD, PSI,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적용범위와 성격 규명, (7) 중국의 영해 분쟁 접근방식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슈---이어도, 독도의 상호 영향과 한·중·일·ASEAN관계에 대한 전략적 파급효과의 종합적 검토), (8)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과 한국의 대응

II. 중국 경제 · 정치 · 사회의 동향과 제약요인

1. 경제

- 2012 1-3분기 7.4% 까지 GDP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9월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비준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2012년 8%이상의 경제성장 가능
- 도시화 및 중소도시 건설, SOC 투자,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의 성장 공간이 존재하나,
- 국진민퇴(國進民退), 관(官)주도형 경제의 행정적 통제와 권력 남용/부패, 국유부문의 독점,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보호주의, 빈부격차와 계층 고착화, 이중경제의 심화
- 과도한 외자(다국적기업 포함) 의존형 수출 및 기술 구조의 취약성, 주요 수출시장과의 무역 마찰, 외환보유고/환율/유동성 관련 리스크
- 경제구조 전환의 한계성(이념, 가치관, 권력구조),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의 결합 구조

2. 정치

-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시진핑/리커창 체제 출범, 정치국 상무위원 9인→7인으로 조정(사법/공안 기능의 분리, 효율적 의사결정 및 정치관리)
-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선동정치', '영웅지향적 야심가', '이념적 편향성 및 파벌'에 대한 경고 및 해결 능력 과시했으나, 새로운 비전/돌파력과 지도력을 갖춘 마오쩌둥, 덩샤오핑 형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현상유지적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 상존
- 관(官)주도형 경제체제와 독점적 경제구조로 인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이 결합된 기득세력의 보수적 양상 확산('국진민퇴')-정치 및 중국공산당 내부의 민주화 지연
-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비전의 부재('애국정서', '국가주의'에 의존하여 사회통합 시도- '치욕의 세기'를 만회하기 위한 '부국강병론' 또는 중국 중심의 수직적 역내질서 구축을 통한 '안정' 추구)
-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내적 현상유지를 위해 대내적 '고성장-사회통제' 정책과 대외적 '국가주의'를 결합
- 미국의 복합적 기능: 내부 통합을 위한 가상의 '적', 역할모델(연방제, 세계전략), 양자관계에서의 전략적 협력대상, 다자 관계에서의 전략적 경쟁자

3. 사회

- 토지 재산권의 모호성, 저임금 성장(계층 이동의 한계성), 관(官)권의 남용, 잠재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 1인당 평균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성장은 제한적
- 경제적 갈등 → 정치 민주화를 통한 법치체제의 확립 가능?
- 사회적 관념, 가치관, 행위양식: 중국사회의 지속성 > 변화
- 사회갈등의 엔트로피 증가, 단 이의 해소 또는 소화를 위한 사회변화의 동력은 취약, 조건의 미성숙

- 티베트, 신장,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은 이슈화 되고 있으나, 중국의 압도적 통제력과 이해관계에 종속적인 국제사회의 무기력 등으로 결정적인 전기를 맞기 어려움.

III.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 전망

1. 개관

중국 정치권력 이해관계 절충의 결과인 시진핑의 정책 및 전략 선택 및 변화 공간은 제한적, 혁신보다는 후진타오시대의 지속적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중국지도부의 보수적 이익집단화(정·군·산·민 복합체의 이해관계 중첩)에 따라 정치 및 경제 민주화, 사회구조의 변화는 제한적 영역에 그칠 것
- ‘부국강병’ 과 ‘전통문화’ 를 대체할 중국지도부의 새로운 비전 부재에 따른 국가주의 지속
- 미국과의 양강(兩強)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패권 확보와 중국 영향력 확산
- 구체적 전략 수단: 중국시장 진입권 부여, 유무형의 무역/투자 장벽 활용(중국경제의 다층구조 포함)
- 중국 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로 인한 China risk는 제한적일 것이나, 중국의 정책 변동성과 불투명성, 관주도형 경제, 국가주의에 기초한 대외관계 등은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타이완 문제

- ‘3통’ 을 포함한 사회적 교류가 실질적(de facto) 통일’ 을 가져왔다는 관점은 양안관계의 ‘휴화산’ 과 같은 본질과 거리가 있음.
- 대만 정권의 속성, 대만 여론(대만독립 관련)의 향배, 미국-일본의 대 대만 및 동중국해 정책, ASEAN-중국 관계, 한반도 상황 등의 복합적 변인이 언제든지 양안관계를 변질시킬 수 있음 (예: 1996년 3월의 대만 근해 미사일 발사).
- 중국이 내부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될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애국주의’ 의 연장선상에서 대만에 대한 적극적 통일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음.--역내 질서 불안정 초래

3. 한반도 문제

- 북한의 핵보유 및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제제재 움직임에는 ‘소극적 동참’ 또는 ‘감속로 기능의 동참’ 을 선택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묵인’ 에 가까운 태도를 견지
- 북중 경제관계는 중국 동북지역 경제의 ‘회색지대’ 적 성격을 활용한 중국지방정부-북한 간의 특정 항목 중심의 협력, 변경무역,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한 합의 및 SOC 건설 등을 통해 지속/확대 될 것이나,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 (북한의 동북4성화 또는 북한 개혁개방 촉진 기능론 등은 다같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

-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한중FTA와 사회교류 정치/군사 고위층 상호방문 등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 및 한미동맹의 약화 추진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division management'(cf. unit management) 양상을 보일 것임

4. FTA vs. TPP

- 중국은 자원 및 시장확보, 접경국 및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산과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구축, 미국의 영향력 견제 등의 목적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FTA 선호.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를 위한 핵심 전략 개념으로 TPP를 활용.(TPP는 자유무역/투자를 위한 FTA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미국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중국의 선호 순위: ASEAN+1 → ASEAN+1+2 → ASEAN+1+2+3 →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
- 미국의 TPP구상 진척도에 따라 중국의 대응 전략은 강화될 것임
- 미국과의 전략 및 경제대화 (S&ED)를 통한 미국과의 이해관계 절충

IV. 한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

1.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한·중 공동보조 및 협력 가능성은 낮다.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답보는 한국의 대북정책 공간을 제약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레버리지로 사용돼 왔던 지난 20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점에 도달.
- 시진핑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시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2. 한·중FTA 협상과는 별도로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S&ED)식의 대중국 접근이 필요하다.

- 한·중FTA는 항목별 주고받기식보다 적극적 win-win 전략 구사 필요(EU 및 US의 경우와는 상이)
- 대중국 농업투자를 통한 적극적 대처 필요 (12.1 발표 협동조합기본법 활용)
- FTA 협상을 위한 투명도 및 시장경제 표준 제정 필요 (협상카드화)
- FTA 등 포괄적 협상들에 더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와 같은 분야별 실질적 협력틀 구축 우선 고려 필요(식량 석유 자원공동체, IT산업표준 공동체, 동북아 SOC공동체, 동북아 환경 및 기후 공동체, 동북아의 잠재적 경제/안보위기에 대처할 한·미·중·일 협의체 등)
-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자산' 확보 필요

3. 한반도가 중·미 전략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전략 조율이 필요하다.

- 북한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의견조율이나 부분적 협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입장이 궁핍해 질 가능성

- 남북한과 중·미간의 전략 game과 pay-off matrix를 감안한 입체적 안보 및 경제 전략 구사 필요 (중국과 북한의 신지도부의 mastermind적 역할과 전략에 대한 강박관념 탈피 필요---가변성 가정 필요----한국의 전략 공간 확보)

동북아 지역협력의 전망

김성철 세종연구소

I. 지역협력의 전망

II. 협력 방안

III. 일본의 입장

동북아 지역협력의 전망

김성철 세종연구소

I. 지역협력의 전망

동북아 지역협력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요인이 작용하여 순조롭게 진전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갈등과 경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협력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한편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의 무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동량 및 인적교류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의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에서의 높은 교육열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역내무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역내 협력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협력사무국이 설립된 점도 중요한 협력 요소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요소가 만만치 않다. 지역내 군사안보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경쟁관계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사회부문에서는 역사 및 문화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외교적 차원에서는 새롭게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외교 및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면서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세가 나타나고, 최근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은 새로운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일 및 한일간의 영토분쟁 심화는 결정적인 안보적 불안요소로 상존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 3국간의 수평적 경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과거 불행한 역사의 기억으로 인하여 한중일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한중일간 문화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문화교류의 확산이 한류·반한류 등과 같이 문화적 경합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중일의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정부의 정치적 조치를 자제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자유무역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II. 협력 방안

1990년대 이후 아시아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중일협력이 논의되고 강화되었다. 금융위기사 통화금융협력과 대지진시 방재협력 및 무역투자교류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필요에 따라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정보교환 및 안보협력도 지속되었다. 나아가 한중일의 공동비전과 네트워크 형성, 상호 문화의 이해, 자원의 공동개발, 영토문제의 장기적 평화적 해결, 다자협력체제의 형성,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 다자적 위기관리시스템의 형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의 구상과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에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는 다분야의 다층적 복합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진화하는 경우 안보상 대립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적 다원화와 포용성의 확대 노력, 경제적인 호혜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의 강화, 해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영토분쟁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 싱크탱크와 전문가의 교류협력 강화, 다자안보 협력메커니즘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열린 국익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국에 한정된 협의의 국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열린 국익을 추구하고, 합리적 원칙과 강대국의 자제력을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번영 및 열린 지역주의를 추진하고, 가치관 공유와 상호신뢰 및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양자동맹 등 기존의 안보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한 국내 정세의 안정, 균형적인 국가정책 및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

지역협력의 비전 전파, 정부 및 민간을 망라한 다국적 협력네트워크의 형성, 다자간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독려, 역내 국가들의 문화와 국내여론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영토·자원분쟁이 심화되면, 지역국가들이 자국의 영토와 주권 및 항행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 영토·자원분쟁과 군비경쟁은 국가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

동북아 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영토분쟁을 일방적으로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분쟁중지(모라토리움)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자원의 공동개발 등 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회귀,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국제환경

에서, 동북아의 세력불균형에 대응해서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초한 한중일+미국의 세력균형구조 즉 동북아 균형네트워크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의 갈등상황을 조정하는데 세력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와 경제협력체제의 형성과 기능이 중요하다.

III. 일본의 입장

복합적인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보수화 및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증강 및 그에 따른 영토·자원분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후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우선·안보자제의 원칙과 정책이 변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 속에서 2008년 미국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당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로 안보관련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보측면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의 영토주권 유지와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면서, 자원 확보에 힘쓰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협력: 러시아의 관점에서

고상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I. 동북아 지역 갈등과 협력의 현황과 전망

1. 양자적 협력관계
2. 양자적 갈등관계
3. 다자적 협력관계

II.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중진국 외교의 필요성
2. 대러협력의 과제

동북아 지역협력: 러시아의 관점에서

고상두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I. 동북아 지역 갈등과 협력의 현황과 전망

1. 양자적 협력관계

a)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를 다극적 국제질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음.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목표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것임. 양국의 대미 견제전략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세력균형을 모색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역할균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엔안보리에서의 협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간의 협력요인으로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군사안보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있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러중 양국은 2005년 이래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음.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대만, 센카쿠, 남사군도 분쟁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러시아 군과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음. 경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와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중국은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의 무기수출 규제대상국으로서 러시아가 유일한 첨단무기 수입국임. 아울러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대량 수입하고 있음.

b) 러시아와 북한의 친선우호 협력관계

- 2000년 푸틴 대통령은 소련 및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함. 이 방문에서 양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친선우호조약을 체결함. 이 조약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서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약속하였음
- 북한의 김정일은 2011년 8월 러시아를 방문한 기회에 가스관 건설에 큰 관심을 보였음. 그리고 9월에 가스프롬은 남북한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김정일 사망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가스관 통과료 협상을 벌이고 있음.
- 러시아는 나진항 부두를 50년 임대하였음. 연해주의 주요 항만들은 물동량 증가로 포화상태이며, 대형선박 접안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기에는 지형적 조건이 열악함. 나진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항만을 찾고 있는 중국과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을 꾀하는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항만임. 하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경쟁에서 더 우위적인 위치에 있음. 중국이 나진항에서 임대한 부두는 작고 수심이 얕아서 많은 배를 동시에 정박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해 러시아는 나진항의 가장 큰 부두를 임대하였고, 게다가 나진항과 북러 국경도시인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완공하여 현재 시험 중에 있음.
- 오랫동안 러북 경제협력의 걸림돌이었던 구소련의 부채가 정리되고 있음. 금년도 양국은 구소련 채무 20억 달러의 90% 이상을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하였음. 2001년도에도 유사한 채무조정 합의가 있었으나 당시 러시아 국가두마의 비준거부로 무산 되었으므로 아직 최종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

c)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3대 신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였음. 이것은 석유가스 협력을 위한 에너지 실크로드 사업, 극동지역의 농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실크로드 사업, 그리고 유라시아의 물류 수송망을 연결하는 철도 실크로드 사업을 말함.
- 러시아는 2017년부터 한국에 대한 가스공급물량을 크게 늘려 연간 750만톤의 가스를 수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로선 사할린의 가스를 액화시켜 선박으로 한국에 운반하고 있는 실정임. 액화가스는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선박에 실어 공급하며, 소비시장에 도착한 후 다시 기화시켜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가스수출을 위해 북한을 경유하는 연간 10bcm 수송능력의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극동지역의 농업개발은 한국에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음. 첫째, 최근 글로벌 식량위기의 반복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극동을 중요한 농업생산기지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둘째,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연해주 지역의 농업생산기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통일에 대비한 북한 식량공급지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우스리스크에 약 2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교역품을 수송해줌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와 해상로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시베리아철도와 한반도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새로이 개척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기대됨.

2. 양자적 갈등관계

a)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

- 영토분쟁이 양국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1956년 구소련은 평화조약 체결시 북방도서 중 2개 섬을 반환해주기로 약속하였음.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북방도서가 제2차대전 전의 결과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러시아 영토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 소련과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방영토인 쿠나시리 섬을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반발을 일으켰음. 그는 총리로서 2012년 7월에 재방문하여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동아시아 영토분쟁 상황에서 북방도서에 대한 자국의 실효적 지배를 천명한 것임.

b) 러시아와 미국의 안보갈등

- 오랫동안 러시아는 미국에 협력적인 입장이었으나, 2008년 그루지야 전쟁이후 대결적인 자세로 전환하였음.
- 러시아는 미국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적 대립을 하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이 서구적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을 관철하기 위해 힘에 기반한 내정간섭을 피한다고 비판하고, 동일한 논리가 자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함.
-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선호가 반미로 바뀌었음. 친 서방적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이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KGB출신으로서 구소련의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임. 그는 취임 직후 독일, 프랑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을 순방하여, 유럽, 구소련공화국, 중국이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과시한 반면에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는 불참하였음.

3. 다자적 협력관계

- 과거 러시아의 동북아협력체 가입실적은 미미하였음. 1994년에 ARF(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하였고, 1996년에 ASEAN Dialogue에 파트너로 참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ASEAN과 친선협력조약(Treaty on Amity and Cooperation)을 체결하는 등 주로 동남아와의 교류 협력에 치중하였음.

- 하지만 2010년 이후 러시아는 동아시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 2010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ASEAN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ASEM에 가입. ASEM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협력체이며,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아셈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2011년 11월에는 미국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처음으로 참가. 이로서 러시아는 ASEM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동아시아 국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음.
- 러시아는 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 유치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APEC 회담준비를 위해 약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이 비용은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데 들인 것보다 많은 액수임. 러시아는 APEC 회의를 계기로 낙후된 연해주를 현대화하여, 아태지역과의 협력기지로 만들고자 함. 이것은 푸틴 정부의 국가목표인 현대화의 일환임.
- APEC은 1989년에 창립되어 현재 21개 회원국이 세계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총 50건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관세는 6%이며, 창립당시에는 17%였음. 작년에 WTO에 가입한 러시아도 개방경제로 나아가려고 함.

II.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중진국 외교의 필요성

- 국가 간의 관계에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기 마련임. 그리고 갈등에 직면한 국가는 파국으로 치닫기보다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고 봉합을 추구하게 됨. 러시아는 미국에 대결하지만 타협과 협력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음. 한국이 교량 역할을 통해 동북아 외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음.
- 서로 다른 국익이 충돌하는 국제무대에서 중진국 외교는 대결 보다 협력을 통해 실리를 얻는 외교기술임. 중진국 외교의 특징은 타협과 중재임. 이러한 역할은 강대국이나 약소국 보다 중진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유럽의 벨기에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음.

2. 대러협력의 과제

- 경제협력: 유럽통합의 성공은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있음. 즉 정치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통합 부터 시작하였음. 경제통합의 단계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단일시장, 단일화폐의 순서로 진행됨. 유럽은 현재 단일화폐의 단계에 있는 반면에, 동북아는 자유무역협정도 체

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에 러시아를 참가시킬 필요가 있음. 한러간의 경제협력에서 극동개발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임.

- 영토협력: 오늘날 동북아에서 영토분쟁이 재연되고 있음. 영토팽창은 구시대적 이념임. 영국은 자국의 영토를 100배로 늘렸지만 지금은 섬나라로 전락하였음.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통해 유럽의 패권을 추구하였지만 패전과 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오늘날 유럽이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듯이 동북아도 탈국경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북아의 영토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현 상태의 영토 보존과 국경 인정을 다자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음. 이 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가능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공동포럼 |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NOTE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공동포럼 |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NOTES